

반목과 불신에 찬 과학기술계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교수

우리 과학자 두 사람이 물에 빠지면 서로 발목을 잡아당겨서 결국은 모두 익사해버릴 것이라는 기막힌 농담이 있다. 사실 치열한 국제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자신들을 '우대' 해주어야 한다면서, 정작 서로에게는 눈살을 찌푸릴 정도로 무자비하고 치졸한 인신 공격도 마다하지 않는 것이 우리 과학기술계의 부끄러운 모습이다. 그동안 연구개발 예산은 꾸준히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과학자들이 풍요 속의 빈곤에 시달리면서 사회적 조롱의 대상으로까지 추락해버린 셈이다.

한정된 재원을 두고 벌어지는 치열한 경쟁은 그 자체가 발전의 원동력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 나무랄 일은 아니다. 그런 경쟁에서 탈락했다고 극단적인 불만을 털어놓는 태도가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무조건 탓할 수도 없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이다. 과학자들에게는 목숨과도 바꾸기 어려운 연구비를 지원하는 과정이 충분히 합리적이고 투명하며 공정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 정부의 연구 지원 정책은 급한 물살에 휩쓸리고 있는 나뭇가지와 같아서 종잡을 수가 없다. 개인의 독창성을 가장 존중해야 할 연구 지원 정책이 온갖 구호를 앞세우면서 낯선 이름으로 포장된 지원 사업 모델의 전시장이 되어 버렸다. 목적기초, 창의 연구단, NRL, G7, SRC, BK21, 프런티어 사업 등이 모두 그런 예들이다. 아마도 우

리 정부는 과학기술의 발전이 연구 자체의 성과가 아니라 '연구 지원 사업의 모델 개발'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믿는 모양이다. 정작 중요한 과학자들의 연구는 그런 사업 모델의 성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경우도 있다.

그러나 정부의 예산 확보를 위해서라는 핑계로 해마다 전혀 다른 모습으로 등장하는 새로운 지원 사업들이 사실은 우리 과학기술계에 분열과 반목을 조장하는 근본 원인이 되고 있다. 그럴듯한 포장으로 쉽게 확보한 예산보다는 연구 지원 사업의 특성을 강조해서 어렵게 얻은 예산이 훨씬 값진 것이다. 세계 어느 나라의 경우에도 연구 지원 사업은 개인의 독립적인 연구를 지원하는 것이 중심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정부의 모든 기관들이 우후죽순처럼 거느리게 된 각종 '정책평가원'들이 정작 굶은 줄기는 보지 못하고, 옆으로 뻗어간 작은 가지에 너무 흥미를 느끼는 모양이다. 이제부터라도 '정책 개발'이나 '평가 관리' 보다 '연구' 자체가 정책의 중심이 되어야만 한다.

획일적으로 강조하는 '공동 연구'와 '선택과 집중'도 문제가 된다. 학제간 연구와 과제의 대형화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 부족한 재원을 균등 분배하는 것보다는 적절하게 선택해서 집중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도 있다. 그러나 과제의 필요에 의해서 자연발생적으로 추진

● 지난 1991년 전국의 대학교수 900여명은 명동 성당에서 정부의 교육발전 5개년 계획과 두뇌한국 21(BK21)사업의 전면 백지화 촉구집회를 마친 뒤 가두시위를 벌였다.



되는 공동 연구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불합리한 선택에 따른 과도한 집중은 '재벌' 육성으로 끝나버릴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연구원들의 양식을 믿지

못하고, 참여 인원과 연구비를 획일적으로 책정해버리는, 지금의 지원 사업으로는 자생적인 공동 연구 집단의 출현은 불가능하다. 낭비를 막는다는 이유로 연구비 사용을 극도로 제한하는 것도 우리 과학자들을, 못된 시어머니를 닮은 며느리로 만들어 아무도 믿지 못하는 '인격 불량자'로 만들고 있다. 자연의 신비를 파헤치는 과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긍지를 가진 과학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들의 윤리 의식에 대한 사회의 절대적인 신뢰다.

모든 연구에서 공동 연구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공동 연구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적정 규모가 밝혀져 있는 것도 아니다. 획일적으로 요구하는 연구 집단의 규모가 사업에 따라서 2~40명으로 널뛰듯 춤추고, 참여 자격이 끊임없이 바뀌는 것은 지원 사업이 처음부터 특정 집단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오해를 하게 만든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해마다 바뀌는 그런 임의적인 결정에 따라 전국의 과학자들이 이합집산을 거듭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과학자들 사이의 인간 관계는 극도로 훼손되어 버린다는 점이다. 이미 등을 돌려버린 상대에게 말과 행동을 절제할 필요를 느끼지는 않는 것이 사람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평가 제도가 전제되지 않은, 무리한 선택에 의한 과도한 집중이 곧 우리 사회가 배척하는 '비리'의 구체적인 모습이다. 실제로 불합리한 선택과 지나친 집중으로 공룡이 되어버려서 우리 사회 전체에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우리의 '재벌'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더욱이 당장 확인이 가능한 경제적 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 기술의 개발에는

어느 정도의 선택과 집중이 가능하지만, 그 가치를 쉽게 평가할 수 없는 기초과학의 경우에는 합리적인 선택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연구 지원 사업의 선정 결과에 대한 극단적인 반발이 기초과학의 일부 분야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다. 근본적으로 인성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그런 분야를 전공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학문 자체가 학자들을 그렇게 만드는 것도 아니다.

선택의 방법뿐만 아니라 집중의 정도에도 한계가 있어야 한다. 과도한 집중에 의해서 극도로 비대해진 일부 연구자들이, 소외된 많은 연구자들의 노력과 아이디어까지 마구잡이로 착취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의욕적인 젊은 과학자들에게 공개적인 경쟁을 포기하고 개인적인 인맥을 통해 극소수 '재벌급' 연구자들의 '하청업자'의 길을 가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지나친 선택과 집중은 다양성을 추구하는 사회가 요구하는 '벤처' 연구원의 출현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오늘날 과학기술계가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은 그동안 정책 수립에 참여했던 몇몇 사람들의 근시안적이고 이기적인 안목 때문이다. 훌륭한 연구 능력을 가진 과학자가 반드시 뛰어난 정책 입안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현대 과학과 기술을 구별하지 못하고 기초과학까지도 경제적 도구로만 인식해버리는 엉터리 '과학기술 정책 전문가'들에게 모든 것을 맡겨두어서도 안 된다. 새 대통령의 지적처럼 과학기술계의 위상은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것이고, 비록 2,500년이나 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중용'(中庸)은 중요한 사회적 덕목이다.